

동남아시아 출산율의 거시적 결정 요인: 1961-2022*

최종현**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61년부터 2022년까지 동남아시아 출산율 변화의 거시적 결정 요인을 분석한다. 기존 연구가 전세계적 출산율 변화 요인을 다루거나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연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 논문은 동남아의 출산율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을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검토한다.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 동남아 전반에서 출산율 감소가 관찰되지만, 그 속도와 정도에 있어 국가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조명 한 사회·경제적 요인들 외에 정치적 요인도 이러한 차이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민주주의,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국가 역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통계 분석 결과, 대중집회가 야기하는 정치적 불안정은 출산율과 대체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출산율이 사회·경제적 요인 뿐 아니라, 거시적 정치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결과는 출산율 감소가 사회 전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주제어: 동남아시아, 출산율, 저출산, 정치적 불안정, 인구변천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C2A01092544). 건설적인 제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전북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조교수 겸 동남아연구소 간사, choichonghyun@gmail.com

I. 서론

대한민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이하 출산율)¹⁾이 대체출산율, 즉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을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져, 이미 초저출산 사회로 전환한 지 오래되었다. 그에 따라 지금까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에서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주로 주목을 받아왔다(정성호 2013; Feeney 1994). 그러나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보다 완만하지만 뚜렷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 중 다수에서 저출산이 초래할 장기적인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되고 있다(허경주 2023).

그런데 동남아 내의 출산율 감소의 속도와 정도는 국가별로 제법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싱가포르와 태국은 각각 1.04명과 1.32명의 출산율을 기록하며 동남아 국가 중 끝에서 1, 2위를 차지했다(World Bank 2024). 베트남은 2022년에 1.94명으로 대체 출산율을 약간 밑돌았으며(World Bank 2024), 이후에도 계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박진형 2024). 반면 동티모르,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와 같은 국가들은 출산율 감소의 경향 속에서도 여전히 대체출산율을 훨씬 웃돌고 있다.

출산율 감소는 노동력 부족과 인구 고령화와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교육과 기술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통한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인구 및 인구 구조가 한 국가의 발전에 미치는 이러한 근본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출산율 저하의 흐름 속에서 발견되는 동남아 국가들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은 해당 국가들의 정치, 경제, 사회의 미래를 전망하고 이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1) 합계출산율은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한다(통계청 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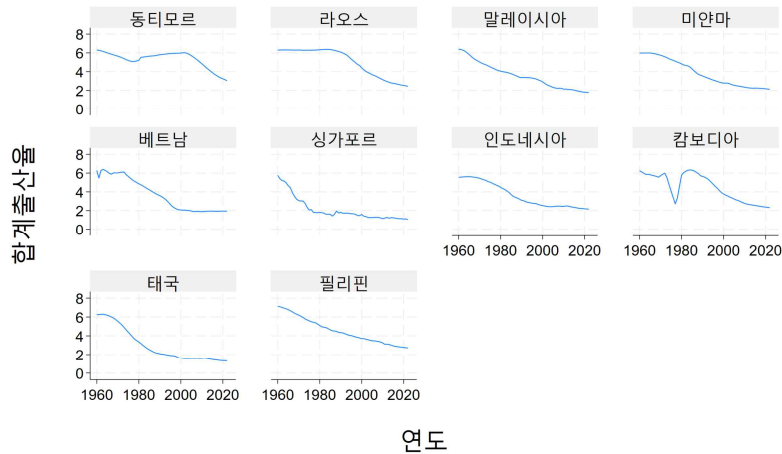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남아 각국의 출산율 결정 요인에 대한 학문적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 전세계적 출산율의 변화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졌으나, 동남아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물다. 그나마 존재하는 연구도 이미 발표된 지 오래이거나 아니면 국가 수준의 출산율이 아닌 개인 수준의 출산 결정을 설명하는 미시적 연구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를 통해 앞서 언급한 현 시대 동남아 각국에서 나타나는 출산율 변화 흐름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공백을 해소하여, 현재 동남아 지역에서 진행 중인 인구 변화를 거시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이에 따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동남아의 출산율 추이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동남아시아의 출산율은 지난 60여년간 상당한 정도로 감소했다. 1960년대에 모든 동남아 국가들은 5~6명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었지만, 지속적인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결과 2022년에 이르러서는 여러 동남아 국가에서 대체출산율을 밑도는 출산율이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출산율 감소의 추세 속에서도 그 속도와 패턴은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베트남은 출산율이 가장 많이 감소한 국가군을 구성하며, 이들은 모두 대체출산율 이하의 저출산 상황으로 진입해있다. 이 중 이미 2003년에 저출산을 넘어 초저출산(출산율 1.3 이하) 단계로 접어든 싱가포르의 상황이 가장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2022년 출산율은 1.04명인데, 이는 전세계에서 한국(0.78명) 다음으로 낮은 수치이다. 출산장려금을 도입하고 육아

<그림 1> 동남아 각국의 합계출산율 추이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24)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업.

주: 브루나이는 자료의 문제로 추후 분석에서 제외되어 위 그림에서도 제외하였음.

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이 도입되었지만, 아직까지 반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태국은 1970년대에 특히 급격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했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락이 이어졌다. 그 결과 2022년 태국의 출산율은 1.32명을 기록했는데, 이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 1만 달러 미만인 국가들 중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치이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경우, 태국의 인구는 향후 50년 동안 약 2,500만 명 감소하여 4,000만명 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박진형 2025). 말레이시아 또한 2022년에 출산율이 1.79명으로 떨어지면서 인구 유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말레이시아 정부는 출산 여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하락세를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다(홍성아 2024). 베트남의 출산율은 2022년에 1.94명으로 대체출산율을 약간 하회했는데, 2054년을 기점으로

인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박진형 2024).

인도네시아와 미얀마의 경우 위의 네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한 출산율 감소를 경험했으며, 여전히 대체출산율 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2년 출산율은 인도네시아의 경우 2.15, 미얀마의 경우 2.13명이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국가개발기획원(Bappenas)은 2045년에 이르면 인도네시아 역시 저출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박의래 2023). 미얀마의 경우, 내전이 지속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출산하기에 위험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The Straits Times 2024/03/11) 향후 출산율이 더 급격히 감소할 염려가 있다.

동티모르, 라오스, 캄보디아, 필리핀은 여전히 비교적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다. 동티모르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걸쳐 완만한 출산율의 감소를 겪었으나, 197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출산율이 반등하여 상승 추세가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지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여 준다. 한 가지 해석에 따르면 이는 1975년 인도네시아의 침공 및 이후 초기 점령 시기의 폭력 사태가 가라앉으면서 나타난 전후 베이비붐에 해당한다(Yeung 2022: 47). 2000년대 이후 이전보다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으나, 워낙에 뒤늦게 그리고 높은 수준에서 감소가 시작되었기에 2022년 기준 동남아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3.05명). 라오스 또한 급격한 출산율 감소의 시기가 동티모르를 제외한 다른 동남아 국가들보다 늦은 1980년대 후반에 시작되었고, 이에 따라 여전히 출산율이 2022년 기준 2.45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캄보디아의 경우 내전 그리고 이후 크메르 루주 집권 기간 동안 출산율이 이미 한차례 대폭 하락한 바 있으나,²⁾ 크메르 루주 정

2) 보다 정확히는 내전 전체 기간이 아니라 내전 중 폴 포트를 위시한 급진적이고 반(反)베트남적인 분파가 경쟁 세력을 물리친 다음 크메르 루주를 장악하고, 이후 크메르 루주가 내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는 1973년부터 1975년까지의 시기(Kiernan 2008: 16)부터 출산율의 하락이 시작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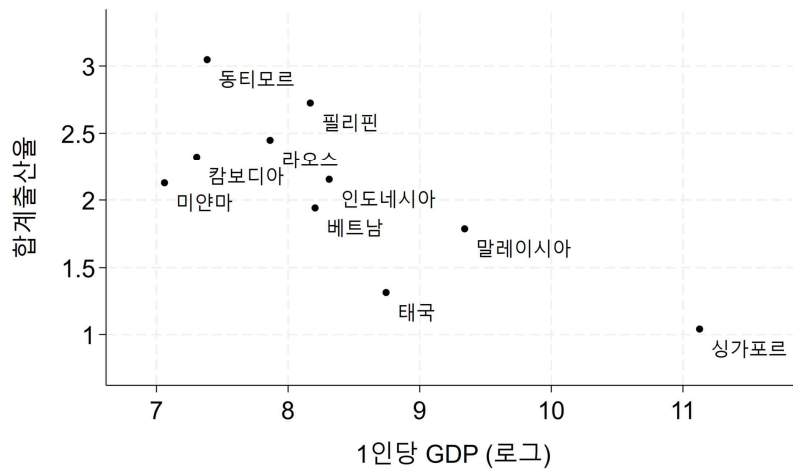
권이 붕괴한 뒤 1980년대 초반에 내전 이전을 상회하는 출산율을 기록하며 이를 만회했다(Heuveline & Poch 2007). 이후 라오스와 마찬가지로 198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했으나,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2022년 기준 2.32명). 마지막으로 필리핀은 다른 나라들과 같은 급격한 출산율 감소의 시기를 겪지 않고, 비교적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는 점에서 예외적이라 할 수 있으며, 현재 동남아 국가 중 동티모르 다음으로 높은 출산율(2022년 기준 2.72명)을 보이고 있다.

종합하자면, 동남아 국가 다수는 출산율 감소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고민해야 할 시점에 서 있다. 물론 대체출산율 이상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국가들의 경우, 여전히 인구 증가에 발맞춰 교육 및 고용 기회를 확충하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많은 수의 동남아 국가들은 점차 저출산에 따른 노동력의 부족, 사회복지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수준에서 안정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여러 동남아 국가는 출산 장려금 도입, 보육 지원 및 육아 휴직 확대 등의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의 대부분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요인들, 예를 들어 출산 및 육아 비용, 경력 지속 가능성 등에 초점을 맞춰 이를 보다 출산 친화적인 방향으로 돌리는 데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출산 결정에는 이러한 미시적인 요인들 외에도 경제발전, 정치체제 등 국가 수준의 거시적인 요인들 또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 역시 출산율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거시적 요인들 중에서 아마도 가장 많은 주목을 받은 것은 경제발전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발전 수준과 출산율 사이에 대체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보고된 바 있다

(Heer 1966). 2022년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아래 <그림 2>는 동남아에서도 경제발전 정도와 출산율 사이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2년 동남아에서 1인당 GDP와 출산율 사이 상관관계 수는 -0.67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대체로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그림 2> 동남아 각국의 2022년 출산율과 경제발전 수준



출처: 세계은행(World Bank 2024)을 활용하여 저자가 작업

주: 브루나이는 자료의 문제로 추후 분석에서 제외되어 위 그림에서도 제외함

그러나 일부 국가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며, 경제 발전만으로는 출산율 차이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음을 방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태국의 경우 2022년 1인당 GDP가 6,276달러로, 말레이시아의 11,399달러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출산율은 오히려 1.32명으로 말레이시아의 1.79명보다 확연히 더 낮다. 경제적 수준으로 예상되는 것보다 훨씬 가파른 출산율 감소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다른 예로 필리핀과 베트남의 경제발전 수준은 비슷하지만 필리핀

의 출산율(2.72명)은 베트남의 출산율(1.94명)에 비해 현격히 높다. 이러한 사례들은 출산율 변화를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경제발전 외에 다른 거시적인 요인들 또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동남아의 국가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을 밝히는 경험적 분석을 실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 장에서는 먼저 출산율의 결정 요인에 대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III. 선행 연구 검토

1. 전세계 범위의 연구

인구통계학에서는 고사망, 고출생의 인구 안정 상태에서 저사망, 저출산의 인구 안정 상태로의 전환을 인구변천(demographic transition)이라고 지칭한다. 인구변천이론(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은 산업화, 도시화 등의 현상을 포괄하는 근대화를 이룩한 변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한다(Notestein et al. 1944; Kirk 1996). 넓은 시각에서 볼 때 이후의 연구 중 상당수는 근대화의 어떠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측면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히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 중에서는 소득과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가장 많이 연구된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소득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베커(Becker 1960)는 부모가 자녀의 수(quantity)와 질(quality) 모두에서 효용을 얻는다고 이론화했으며, 이후 베커와 루이스(Becker & Lewis 1973)는 소득이 증가할수록 가정이 자녀의 수보다 질을 우선시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즉, 자녀의 질에 대한 소득 탄력성이 자녀의 수에 대한 소득 탄력성보다 일반적으로 더 크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부모

는 소득이 증가할 때 자녀의 수를 늘리기보다 자녀 한 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경향을 보인다. 개인 수준에서는 소득과 출산율 간의 부정적 관계가 항상 일관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Freedman & Thornton 1982), 국가 수준에서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관계가 관찰된다(Hailemariam 2024). 같은 맥락에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 질수록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된 바 있다(Butz & Ward 1979). 여성의 고용 기회와 실질임금이 증가하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소득, 즉 자녀를 가지는 데 따르는 기회비용이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반면 보다 최근의 실증적 연구에서는 소득 그리고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사이의 부정적 관계가 완화되거나 오히려 긍정적인 관계가 관찰되고 있다(Ahn & Mira 2002; Engelhardt et al. 2004; Goldstein et al. 2009; Myrskylä et al. 2009). 관련 연구에 대한 최근의 검토에 따르면 “인구변천이 시작된 시점부터 20세기 후반까지 출산 결정과 관련하여 성립했던 기본적인 경험적 관계들이 최근의 고소득 국가 자료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Doepke et al. 2022: 21). 기존의 상관관계가 무너지는데 기여한 것은 많은 국가에서 자녀 양육과 커리어가 양립 가능한 환경이 마련되었다는 점이다(Doepke et al. 2022; Rindfuss et al. 2016). 바 외(Bar et al. 2018)는 보모, 가사도우미, 조리된 음식이 점차 보편화되면서 부모들이 자녀 양육을 시장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따르는 기회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한다. 에스핑-안데르센(Esping-Andersen 2009)은 정부의 가족 지원 정책을 강조하는데, 경력과 육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지원 정책이 부재할 때는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출산율을 감소시키지만, 관련 정책이 마련되면 출산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더불어 그는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가 포괄적인 가족 지원 정책과 성평등 정책을 통해 다른 복지국가 유형보다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18개 국가를 대상으로 가족 지원 정책의 효과를 분석한 실증적 연구(Luci-Greulich & Thévenon 2013)는 유급 휴가, 보육 서비스, 그리고 재정적 지원이 실제 출산율 반등에 기여했음을 보여준다.

사회적 요인 중에서는 유아 사망률과 인구밀도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녀 중 일부가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부모는 자신들이 원하는 가족 규모를 달성하기 위해 실제 원하는 수보다 더 많은 자녀를 낳기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가능성과는 별개로, 자녀가 실제로 사망했을 때 이를 만회하기 위해 추가 출산을 결정할 수 있다.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유아 사망률과 출산율 사이에는 강한 부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Doeppke 2005; Ben-Porath 1976). 인구 밀도와 관련해서는, 과밀 상태가 될수록 점차 ‘병리적’ 행동이 증가할 수 있고, 이러한 행동에는 출산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Galle, Gove & McPherson 1972). 보다 최근의 자료를 이용한 경험적 분석은 이러한 주장을 다시금 뒷받침해 주었다(de la Croix & Gobbi 2017).

정치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펑 외(Feng et al. 2000)는 정부 역량과 정치적 안정성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이들의 이론은 개인들이 자녀를 양육하는데 따르는 경제적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데, 양육의 기회비용이 높을수록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역량이 뛰어난 정부는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인적 자본 및 공공 인프라에 대한 효과적인 투자를 통해 노동 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녀 양육 대신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로 결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출산율은 감소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정치적 안정성 또한 경제 활동의 불확실성을

줄여 투자 활성화와 소득 증가를 야기하고, 결과적으로 양육의 기회 비용을 높여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한편 바쏘(Basso 2015)는 정치체제의 영향에 주목하면서, 민주주의가 출산율 감소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민주주의에 동반하는 시민권 확대는 출산 결정에 대한 여성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 또한 민주주의가 촉발하는 경제발전, 교육기회 확대 등은 출산에 따른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2. 동남아 지역 연구

이성용(2010)의 선구적인 연구는 동남아의 인구변동 전반을 조망하면서, 동남아 각국의 출산율의 변화에 대해서도 주로 기존 연구를 동원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동남아 출산하강의 주된 원인은 가족계획운동을 통한 피임 공급, 초혼연령의 상승, 독신율의 증가, 원하는 자녀 수의 감소 즉 소자녀관 이데올로기등과 같은 요소들로 설명된다”(이성용 2010: 158). 다시 말해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태적 또는 관념적 요인들이 출산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개인이 평균적으로 갖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동남아 지역의 출산율 연구는 개인 수준의 의사 결정에 초점을 맞추는 미시적 연구 위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가 간의 출산율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Hirschman & Guest 1990a, 1990b; Hirschman & Young 2000; Jones 1990). 허쉬만과 게스트(Hirschman & Guest 1990a)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 네 국가의 1970년 또는 1971년, 그리고 1980년 인구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율 결정 요인을 다층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이들의 분석은 개인을 하위 분석 수준으로, 네 국가의 지역 단위를 상위 분석 수준으로 삼고 있는데, 지역 수준에서는

중학교나 그 이상을 다닌 적 있는 여성의 비율, 비농업 분야에 고용된 여성의 비율, 그리고 영아 사망률이 대부분의 분석에서 출산율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교육과 고용과 관련한 앞의 두 변수는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영아 사망률은 전세계 범위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저자들은 같은 해 발표된 다른 논문(Hirschman & Guest 1990b)에서도 한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필리핀을 비교하면서 경제 성장과 도시화 외에도 가족 구조, 종교, 정책환경 등의 맥락적 요인이 출산율에 영향을 주었음을 주장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인의 출산 행태를 비교한 존스(Jones 1990) 또한 비슷한 결론에 도달한다. 여성의 교육 및 고용 기회 확대, 영아 사망률 감소가 말레이인들의 출산율 감소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존스는 소비주의의 확산과 정부 주도의 가족 계획 정책 등도 출산율 감소에 기여한 요인으로 지목했다. 마지막으로 허쉬만과 영(Hirschman & Young 2000)은 1968-70년과 1988-90년 사이 동남아 7개국의 출산율 변화를 다층 모형을 활용해 분석하는데,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 여성의 교육수준과 영아 사망률에 더해, 아동의 가정 내 역할 변화 또한 출산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즉, 경제 활동을 통해 가족 부양에 기여하는 아동의 비율이 점차 줄어든 것이 출산율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보다 최근의 연구(Yeung 2022; Yeung et al. 2018)는 출산율 및 인구 변동과 관련한 동남아 국가 간의 비교를 2010년대까지 확장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연구의 초점은 대체로 국가 간 추세의 차이를 조명하는데 맞춰져 있으며, 이를 넘어 차이의 원인을 설명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영(Yeung 2022)의 경우 4장에서 출산율을 다루는데, 출산율을 여러 측면으로 나누어 그 추세를 고찰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평균 출산 연령, 연령별 출산율, 청소년 출산율, 이상적 출

산율(원하지 않은 출산을 제외하고 계산한 출산율)에서 나타나는 국가별 추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러한 세부적인 양상은 모두 합계출산율과 연관되어있지만, 이를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보기보다는 같은 현상의 다른 측면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영 외(Yeung et al. 2018)는 남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가족에 대한 리뷰 논문으로, 관련 연구자들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해주고 있다. 그러나 동남아의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주로 개별 국가에 한정된 보고서를 인용하고 있거나, 국가들 사이의 차이를 기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출산율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거시 수준의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다수의 연구에서 1990년대 이전 시기만을 다루고 있어, 최근의 보다 역동적인 사회·경제적 변동과 출산율 변화의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다음으로, 분석의 대상인 국가들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로 한정되어 있고, 동남아 전역을 포괄하는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연구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요인들에 치중하고 있고, 정치적 요인들은 분석에서 대체로 소외되어 왔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최근의 자료를 수집해 거시적 수준에서 출산율 결정 요인들에 대해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요인들 뿐 아니라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을 밝히고자 한다.

IV. 정치적 요인과 동남아시아의 출산율

본 연구는 펑 외(Feng et al. 2000) 그리고 바쏘(Basso 2015)의 연구를 따라 정치적 요인들에 주목하고, 그것들이 동남아시아의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치적 요인들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정치적 요인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에 중대한 작용을 하거나 또는 그 영향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살펴봤듯이, 최근의 연구는 소득이나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출산율에 항상 동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Esping-Andersen 2009; Luci-Greulich & Thévenon 2013). 그런데 정책의 방향과 적실성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정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정치 환경이 경제 발전 그리고 여성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 역시 이미 충분히 검증된 바 있다(Acemoglu & Robinson 2012; Inglehart & Norris 2003).

둘째, 동남아시아는 다양한 정부 형태가 혼재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여러 정치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선거를 통한 권력 교체가 자리잡은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베트남과 라오스는 의심의 여지 없는 독재 국가로, 견고한 공산주의 일당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 한편 태국과 미얀마처럼 군부의 정치 개입이 반복되는 국가도 있으며, 후자의 경우 2021년 쿠데타 이후 독재로의 퇴행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반대 세력이 물리적 저항을 시작하며 내전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이같은 정치적 다양성은 동남아 국가들 사이에 정책 집행 능력, 시민 참여 수준, 여성 권리 보장 정도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발생시킬 것이며, 이러한 차이가 출산율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해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정치체제, 정치적 불안정성, 그리고 국가 역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이다. 먼저 정치체제와 관련해서 민주주의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증진을 통해 출산율을 감소시킬 것이다. 정치체제가 민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비롯해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³⁾ 이러한 권리의 확장은 선택적으로 정치적 영역에 한정해서 이루어질 수 없고, 삶 전반에 걸친 권리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 표현과 참여를 위해서는 스스로 비판적으로 사고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없는 발언과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주의에 따른 시민권의 확대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신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추가적으로, 민주주의 하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성평등과 여성 권리 증진을 위해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 역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키우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데 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이 커질수록 과거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교육, 경력 개발 등을 통한 개인적 성장을 위해 자녀 출산을 미루거나 자녀 수를 줄이는 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게 된다(MacDonald 2000). 정리하자면 민주주의 하에서 여성은 출산에 대해 보다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고, 이는 출산율 전반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다음으로 정치적 불안정성 또한 여성의 출산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혼란은 교육 및 고용 기회를 위축시키고, 또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가시켜 교육과 고용으로부터 거둘 수 있는 기대효용을 낮추는 효과를 낳는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잠재적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람들이 희망하는 자녀의 수가 늘어나고 출산과 비출산의 기로에서 전자를 선택할 유인이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정치적 불안정성은 국가의 가족계획 정책이나 보건 서비스 전달 체계를 약화시켜

3) 19세기 영국과 같이 민주주의가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가던 과정에서는 정치적 권리가 남성에게 한정되어 확장되어 가던 시기도 있었으나,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 이러한 경우를 온전한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다.

피임수단의 접근성을 낮출 수 있는데, 이 역시 출산율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반면, 국가 역량—즉,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로서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수행 능력—은 출산율에 반대의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한 국가 역량은 일반적으로 교육, 고용 등 경제 전반에 걸쳐 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이는 경제 활동의 기대효용과 출산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에 따라 출산은 개인의 생애 계획에서 더욱 신중하게 고려되는 선택지가 될 것이다. 또한 국가 역량이 높을수록 가족계획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보전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어 영·유아 사망률이 낮아질 것이고, 이는 모두 출산율을 구조적으로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V. 경험적 분석

이 장에서는 국가 간 패널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적 요인들이 동남아 각국의 출산율 추이를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용을 갖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출산율을 포함한 사회 및 경제 자료는 모두 세계은행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세트를 통해 수집했으며, 정치 자료는 모두 민주주의 다양성(V-Dem, Varieties of Democracy) 데이터세트에서 구했다. V-Dem에서 제공하는 지표들은 여러 전문가의 평가를 바탕으로 베이저안 문항반응이론(Bayesian item-response theory) 모델을 이용해 등간 척도(interval measure)로 구성되며, 국가 간 비교 가능성을 보장한다.

이 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합계출산율로, 특정 연도의 연령별 출산율을 기준으로 여성이 가임 기간을 모두 거쳤을 경우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한다. 합계출산율은 공식적으로 등록된 출생 기록, 인

구조자 자료, 또는 표본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된다. 독립변수는 민주주의, 정치폭력, 대중집회, 그리고 영토 통제이다. 민주주의는 V-Dem의 선거 민주주의 지수(electoral democracy index)를 사용해 측정했다. 선거 민주주의 지수는 민주주의를 선거의 책임성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표현의 자유와 다양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언론의 존재 여부도 반영한다(Coppedge et al. 2024: 47). 정치폭력과 대중집회는 정치적 불안정성의 두 척도로 사용되었다. 정치폭력과 대중집회는 둘 다 중대한 정치적 현상이며, 그 빈도가 높을수록 정치적 불안정성이 커질 것이라는 점에 큰 이견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폭력의 정도는 “비국가 행위자들이 사람들에게 대해 얼마나 자주 폭력을 행사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통해 측정되고(Coppedge et al. 2024: 232), 대중집회는 “올해 대중 동원의 발생 빈도와 규모는 어느 정도”였는지에 대한 응답을 통해 측정된다(Coppedge et al. 2024: 234). 영토 통제는 “국가는 영토의 몇 퍼센트(%)에 대해 실질적인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근거하는데(Coppedge et al. 2024: 197),⁴⁾ 직접적으로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측정하는 지표가 부재하므로, 영토 통제 능력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를 가늠하고자 한다.⁵⁾

사회·경제적 변수들은 모두 통제변수로서 분석에 포함한다. 구체적으로는 1인당 GDP, 유아사망률, 인구밀도, 정부최종소비지출, 중등교육 여성비율,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의 영향을 통제하고자 한다. 1인당 GDP를 통해서는 국가의 경제발전 수준을 가늠하고 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인구변천이론이 동남아에도 적용된다면 1인당

4) 이 변수의 경우, 다른 V-Dem 변수와 달리 베이지안 문항반응이론이 아닌 부트스트랩팅(bootstrapping) 방식을 통해 여러 전문가들이 제시한 값을 이들 사이의 편차와 불확실성을 줄인 하나의 최종 추정치로 결합시켰다.

5) 팡 외(Feng et al. 2000)는 세금을 걷는 능력을 강조하는데, 이를 측정할 수 있는 GDP 대비 세수 자료는 결측치가 많아 활용하기 곤란하다.

GDP는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값은 2015년 명목 달러를 기준으로 계산되었고, 그 한계효과가 체감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로그변환 후 사용했다.⁶⁾ 유아사망률은 태어난 1,000명의 아이 중 5세 이전에 사망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 검토에서 다루었듯이, 유아사망률이 높으면 (예상되는) 자녀의 사망을 보상하기 위해 출산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인구밀도는 1제곱킬로미터 당 거주하는 인구로 측정했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인구밀도가 높아질수록 사회병리적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할 것이다. 인구밀도 또한 그 한계효과가 체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로그변환한 값을 투입했다. 정부 최종소비지출의 경우, 복지 지출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동남아의 상황을 감안해 이를 간접적으로나마 측정하기 위해 포함했다. 다만 원자료를 그대로 쓰지 않고, 그 비중이 크지만 복지와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군비지출을 제외한 값을 활용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값을 GDP 대비 비율로 환산하여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정부최종소비지출의 GDP 대비 비율이 높을수록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쉬워지면서 출산율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등교육 여성비율은 중등교육을 받는 전체 학생 중 여성의 비율을 의미한다. 초등교육 이상의 보다 심도 있는 교육을 받은 여성이 많을수록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권리가 신장될 것이라 예상된다.⁷⁾ 마지막으로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전체 여성에 대한 백분율로 계산되었고, 이를 통해 여성의 경제적 활동 정도를 측정한다. 기존 연구에 따르

6) 예를 들어 1인당 GDP가 2,000달러에서 3,000달러로 증가할 때의 1,000달러 증가는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1인당 GDP가 4만 달러에서 4만 1,000달러로 증가할 때의 1,000달러 증가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할 것이다.

7) 여성 교육 확대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체 여성 중 중등교육을 받은 비율이나 중등교육 연령대 여성의 실제 재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 두 변수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관측값의 수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측값의 수가 더 많은 중등교육 여성비율을 활용하여 여성 교육의 확대 정도를 가늠한다.

면 여성의 경제 참여가 일반화된 상황은 출산과 육아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율 저하에 기여할 것이다. 아래 <표 1>은 이상의 독립변수들 및 통제변수들에 대한 기본적인 기술통계량, 그리고 종속변수인 출산율과의 예상되는 상관관계를 요약한다.

<표 1>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및 출산율과의 예상되는 상관관계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출산율과의 예상되는 상관관계
민주주의	0.26	0.17	0.02	0.71	-
정치폭력	0.05	1.43	-3.06	3.52	+
대중집회	-0.09	1.42	-3.57	3.55	+
영토 통제	88.55	10.05	54.80	99.80	-
1인당 GDP(로그변환)	7.49	1.31	4.81	11.12	-
유아 사망률	67.57	53.21	2.20	286.90	+
인구밀도(로그변환)	4.71	1.46	2.24	8.98	-
정부최종지출	11.31	14.67	2.14	110.90	+
중등교육 여성비율	46.65	5.00	26.54	53.25	-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54.92	13.17	13.65	94.40	-

자료는 1961년부터 2022년까지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 10개국(동티모르,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을 대상으로 수집되었으며, 총 620개의 관측값을 포함한다.⁸⁾ 다만, 독립변수의 결측치로 인해 실제 통계 모형에서 사용된 관측값은 이보다 적다. 패널회귀분석에서는 드리스콜-크라이(Driscoll-Kraay) 표준 오차를 적용했으며, 이는 인접 국가들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을 때 발생

8) 불가피하게 브루나이를 제외한 이유는 이 글에서 정치적 변수를 측정하는데 사용하는 민주주의 다양성(V-Dem, Varieties of Democracy) 데이터세트에 브루나이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횡단면 의존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된 통계 기법이다 (Hoechle 2007). 이 기법은 이분산성에 대해 강건성을 가지며, 추가적으로 시계열적 상관관계를 보정하기 위해 뉴이-웨스트(Newey-West) 조정을 활용했다. 통계분석에서는 또한 동시성 편향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독립 변수에 1년의 시차를 두어 종속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도록 설정했다.

<표 2>는 다섯 개의 모형을 동원한 통계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모형1은 정부최종소비지출, 중등교육 여성비율,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외한 모형이다. 이 변수들이 추가되면 관측값이 상당한 정도로 감소하기 때문에 모형1을 통해 관측값을 최대한 유지한 상태에서 나머지 변수들과 출산율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했다. 이후 모형2~4에서는 정부최종소비지출, 여성 중등교육 참여율,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하나씩 추가하여 이 변수들과 출산율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모형5에서는 모든 변수들을 분석에 포함했다. 결국치로 인해서 모형2에서는 미안마가 분석에서 제외되었고, 모형5에서는 추가로 베트남이 탈락했다.

<표2> 동남아 출산율의 거시적 결정요인

변수	모형1	모형2	모형3	모형4	모형 5
민주주의	0.227 (0.255)	0.492** (0.240)	0.916*** (0.174)	0.134 (0.191)	0.543** (0.237)
정치폭력	-0.082 (0.075)	-0.140** (0.063)	-0.024 (0.068)	0.001 (0.035)	-0.057 (0.065)
대중집회	0.084*** (0.036)	0.085*** (0.030)	0.089*** (0.032)	0.043** (0.020)	0.063 (0.040)
영토 통제	-0.047*** (0.018)	-0.007 (0.014)	-0.002 (0.012)	-0.008 (0.009)	0.008 (0.008)
1인당 GDP	-0.174 (0.129)	0.148 (0.100)	0.160* (0.086)	0.256*** (0.093)	0.320* (0.178)

유아사망률	0.012*** (0.003)	0.024*** (0.001)	0.020*** (0.002)	0.016*** (0.003)	0.015*** (0.003)
인구밀도	-2.059*** (0.127)	-1.807*** (0.177)	-1.964*** (0.100)	-2.062*** (0.174)	-2.105*** (0.292)
정부최종소비지출		0.009*** (0.002)			0.003 (0.006)
중등교육 여성비율			-0.024** (0.010)		-0.037* (0.019)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				0.006 (0.004)	-0.004 (0.007)
상수	18.278*** (2.514)	10.433*** (1.299)	11.257*** (1.375)	11.610*** (1.343)	11.801*** (1.526)
관측값	495	339	250	264	141
국가 수	10	9	10	10	8
국가 고정효과	Yes	Yes	Yes	Yes	Yes

주: 위의 표는 각 변수의 계수를 보고하고 있으며, 괄호 안의 숫자는 드리스콜-크라이(Driscoll-Kraay) 표준 오차(지연 길이 1)를 나타낸다. 모든 독립변수는 1년의 지연값을 사용한다. *** p<0.01, ** p<0.05, * p<0.1 (양측 검정).

모형1에서는 네 개의 정치적 변수 중 대중집회와 영토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변수 모두 제시한 가설과 부합하는 부호를 띠었다. 앞서 대중집회가 초래하는 정치적 불안정은 경제활동의 기대효용을 낮춤으로써, 출산과 경제활동 참여라는 두 선택지 중에서 전자를 선택할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영토 통제를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국가역량의 수준이 높을수록 제도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경제활동의 기대효용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러한 논리에 부합하게 대중집회는 양의 부호를, 영토통제는 음의 부호를 취했다. 따라서 대중집회와 영토통제에 대한 가설은 경험적 분석으로부터 일정한 지지를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나머지 두 독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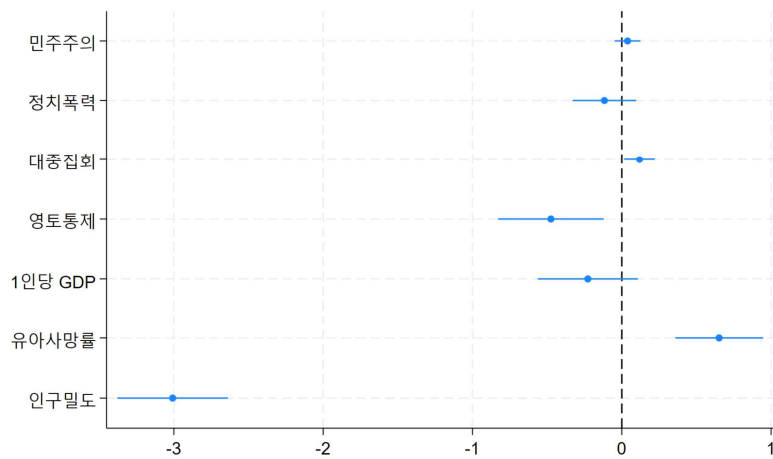
변수인 민주주의와 정치폭력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부호 또한 예상과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났다.

모형1에서 통제변수 중에서는 유아사망률과 인구밀도가 출산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유아사망률이 높을수록 실제 또는 예상되는 자녀의 죽음을 대체하기 위해 더 많은 출산을 하게 되고, 인구밀도는 아이를 낳지 않는 것을 포함한 여러 ‘병리적’ 현상을 증가시키는데, 이러한 설명에 부합하게 유아사망률은 양의 부호를, 인구밀도는 음의 부호를 보였다. 경제발전, 그리고 인구변천이론에서 거론하는 근대화 과정 전반을 포착하고자 포함한 1인당 GDP는 인구변천이론이 제시하는대로 출산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지녔지만, 이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실제 각 변수가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서로 비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아래 <그림 3>에서는 다른 모든 변수들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각 독립변수가 1표준편차 증가할 때 예상되는 출산율의 변화를 시각화했다. 각 변수별 점은 예상되는 출산율 변화의 추정치를, 점을 관통하는 선은 추정치의 95% 신뢰구간을 의미한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 즉 신뢰구간이 0과 겹치지 않는 변수들에 한정하여 해석하자면, 우선 대중집회의 값이 1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출산율은 0.1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영토통제의 경우 값이 1표준편차만큼 증가하면 출산율이 0.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두 수치 모두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출산율의 표준편차가 1.66이고, 대체출산율인 2.1보다 0.2~0.3 정도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도 인구감소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통제변수로 포함한 유아사망률과 인구밀도에 비해서는 정치적 요인들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는데, 유아사망률과 인구밀도가 1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예상되는 출산율의 변화는 각각 +0.65, -3.01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독립변수의 변화에 따라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의 변화량



주: 위의 각 점은 <표2>의 모형1에 근거할 때 각 독립변수가 1 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의미한다. *** $p < 0.01$, ** $p < 0.05$, * $p < 0.1$ (양측 검정).

앞서 언급한대로 <표 2>의 모형2~4에서는 모형1의 변수들에 더하여 순서대로 최종정부소비지출, 중등교육 여성비율,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추가하고, 마지막 모형5에서는 세 개의 추가 변수를 동시에 포함했다. 이를 통해 모형1의 결과가 누락 변수 편향(omitted variable bias)에 따른 것은 아닌지 검증하고자 했다. 유념할 점은 추가 변수들을 포함할 경우 관측값이 상당한 정도로 줄어든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형2~4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누락 변수 편향 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관측값이 감소했기 때문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모형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했던 정치 요인 중 대중집회의 경우,

최종정부 소비지출, 중등교육 여성비율,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하나씩 추가되어도 계속해서 통계적 유의성 유지했다. 그리고 계수가 0.043으로 절반 정도 감소하는 모형4를 제외하고는 모형1 대비 계수의 변화 또한 크지 않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추가 변수들이 동시에 포함된 모형5에서 비로소 대중집회는 통계적 유의성을 잃는데, 이 모형의 관측값은 141로 모형1의 관측값인 495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결과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반면 영토통제는 모형5뿐만 아니라 모형2~4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잃는다. 따라서 모형1에서 나타난 영토통제의 통계적 유의성이 강건하다고 보기는 무리라고 하겠다.

모형1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던 두 정치 변수, 즉 민주주의와 정치폭력 경우, 추가 변수들이 포함된 일부 모형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을 띠는 것이 관찰되었다. 구체적으로 민주주의는 모형2, 모형3, 모형5에서, 정치폭력은 모형2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든 경우에서 두 변수는 예상과는 반대의 부호를 띠지만, 모형1의 결과를 생각할 때 이러한 결과를 강건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통제변수의 경우, 유아사망률, 인구밀도는 모형1에 이어 나머지 모형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을 유지했으며, 따라서 이 두 변수와 출산율의 상관관계는 강건하다고 할 수 있다. 1인당 GDP는 모형3~5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나타냈는데, 인구변천이론에 따른 예상과는 달리 출산율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하지만 모형1~2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이다. 추가된 통제변수 중에는 정부최종소비지출이 모형2에서, 중등교육 여성비율이 모형3과 모형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으며, 출산율과의 상관관계 또한 기존 연구의 예상에 부합하는 방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두 변수와 관련한 결과는 관측값이 줄어든 상황에

서 얻은 것이므로 보다 조심스럽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은 포함된 두 모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VI. 결론

본 연구는 1961년부터 2022년까지, 브루나이를 제외한 동남아시아 10개국을 대상으로 출산율의 거시적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기존 연구가 전세계적 출산율 변화 요인을 다루거나 동남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미시적 연구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동남아 국가 수준에서 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하는 다양한 거시적 요인들을 정치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실증적으로 검토했다.

출산율 감소는 동남아 전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가별로 그 속도와 정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조명한 사회·경제적 요인들 외에 정치적 요인도 이러한 차이에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민주주의, 정치적 불안정, 그리고 국가 역량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가설을 수립했다. 민주주의와 관련해서는 민주주의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신장시킴으로써 출산과 커리어 사이의 선택에서 후자를 고르는 여성들의 비율을 늘릴 것이라 보았다. 정치적 불안정의 경우, 원활한 경제활동에 필요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하시키는데, 이는 노동시장 참여의 기대효용을 떨어뜨리는 효과로 이어진다. 그 결과 출산의 기회비용이 낮아지면서, 경제활동 대신 출산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라 예측했다. 반대로 국가 역량이 높으면 경제 전반에 걸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되어 노동시장 참여의 기대효용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 역량은 출산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질 것이라는 가설을 수립했다.

이어지는 통계 분석에서는 민주주의를 선거 민주주의 지수, 정치

적 불안정을 정치폭력의 빈도와 대중집회의 빈도 및 규모, 국가 역량을 영토통제의 정도로 측정하여 제시된 가설들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대중집회와 관련한 가설만이 설득력있는 경험적 뒷받침을 받았다. 대중집회는 관측값이 제일 적은 하나의 모형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모형에서 출산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영토통제는 첫 모형에서는 출산율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이후의 모든 모형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잃었다. 민주주의와 정치폭력도 일부 모형에서만 통계적 유의성을 띠었고, 이때 나타난 상관관계의 방향성은 가설과는 배치되었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가 사회·경제적 요인을 넘어, 거시적 정치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확인했다. 대중집회와 출산율 사이에 존재하는 양의 상관관계는 출산율 감소가 사회 및 경제 전반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증대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출산율 감소는 무조건적으로 부정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경제적 선택지가 확대되면서 개인에게 출산 외의 다른 매력적인 삶의 경로가 더 많이 열렸음을 반영하는 긍정적인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다.

물론 인구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자발적 선택의 총합이 대체출산율 2.1에 근접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출산율 하락이 경제활동 유인 증가라는 긍정적인 발전의 결과임을 인정하면서도, 출산과 양육의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산과 커리어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닌 병행 가능한 삶의 선택지가 될 수 있도록 유연한 노동 시장과 안정적인 사회 보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박의래. 2023. “인도네시아 인구증가율 급감...2045년 인구 3억1천 800만명 전망.” 『연합뉴스』. 5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517075700104> (검색일: 2025/03/03.)
- 박진형. 2024. “베트남 출산율 올해도 역대 최저...1.91명까지 하락.” 『연합뉴스』. 12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9054700084> (검색일: 2025/03/07.)
- 박진형. 2025. “태국, 5년째 인구 줄어...작년 출생인구 75년 만에 최소.” 『연합뉴스』. 1월 1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50119043700084> (검색일: 2025/03/06.)
- 이성용. 2010. “동남아의 인구변동: 1950-2050년.” 『동남아시아연구』 20(3): 147-182.
- 정성호. 2013. “동아시아의 초저출산 추이와 전망.” 『한국인구학』 36(2): 27-44.
- 홍성아. 2024. “저출산 고민하는 말레이시아...각종 지원정책에도 출산율 세계 평균 이하.” 『아시아투데이』. 8월 13일.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40813010006879> (검색일: 2025/03/07.)
- 허경주. 2023. “‘인구 대국’ 동남아도 ‘아이 안 낳아’...합계출산율 1%대, 왜?” 『한국일보』. 10월 27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102515310001246> (검색일: 2025/03/06.)
- 통계청. n.d. 『합계출산율』. https://kostat.go.kr/statTerm.es?act=view&mid=a10503000000&nPage=1&stat_term_cd=SL4289 (검색일: 2025/02/28.)
- Acemoglu, Daron, and James A. Robinson. 2012. *Why Nations Fail*:

- The Origins of Power, Prosperity, and Poverty*. New York: Crown Business.
- Ahn, Namkee, and Pedro Mira.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667-682.
- Bar, Michael, Moshe Hazan, Oksana Leukhina, David Weiss, and Hosny Zoabi. 2018. "Why Did Rich Families Increase Their Fertility? Inequality and Marketization of Child Care." *Journal of Economic Growth* 23: 427-463.
- Basso, Alberto. 2015. "Does Democracy Foster the Fertility Transition?" *Kyklos* 68(4): 459-474.
- Becker, Gary 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ed.).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9-231.
- Becker, Gary S., and H. Gregg Lewis. 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art 2): S279-S288.
- Ben-Porath, Yoram. 1976. "Fertility Response to Child Mortality: Micro Data from Israe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4, Part 2): S163-S178.
- Butz, William P., and Michael P. Ward. 1979. "The Emergence of Countercyclical U.S. Ferti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69(3): 318-328.
- Coppedge, Michael et al. 2024. *V-Dem Codebook v14*. Varieties of Democracy (V-Dem) Project.

- De La Croix, David, and Paula E. Gobbi. 2017. "Population Density, Fertility, and Demographic Convergence in Developing Countries." *Journal of Development* 127: 13-24.
- Doepke, Matthias. 2005. "Child Mortality and Fertility Decline: Does the Barro-Becker Model Fit the Fact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8: 337-366.
- Doepke, Matthias, Anne Hannusch, Fabian Kindermann, and Michèle Tertilt. 2022. "The Economics of Fertility: A New Era." NBER Working Paper No. 29948. Cambridge, MA: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 Engelhardt, Henriette, Thomas Kögel, and Alexia Prskawetz. 2004.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58(1): 109-120.
- Esping-Andersen, Gøsta. 2009. *The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to Women's New Roles*. Cambridge, UK: Polity Press.
- Feeney, Griffith. 1994. "Fertility Decline in East Asia." *Science* 266(5190): 1518-1523.
- Feng, Yi, Jacek Kugler, and Paul J. Zak. 2000. "The Politics of Ferti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44(4): 667-693.
- Freedman, Deborah S., and Arland Thornton. 1982. "Income and Fertility: The Elusive Relationship." *Population Studies* 19: 65-78.
- Galle, Omer R., Walter R. Gove, and J. Miller McPherson. 1972. "Population Density and Pathology: What Are the Relations for Man?" *Science* 176(4030): 23-30.

- Goldstein, Joshua R., Tomáš Sobotka, and Aiva Jasilioniene.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 663-669.
- Hailemariam, Abebe. 2024. "Income and Differential Fertility: Evidence from Oil Price Shocks." *Journal of Demographic Economics* 90: 31-54.
- Heer, David Michael. 1966. "Economic Development and Fertility." *Demography* 3(2): 423-444.
- Heuveline, Patrick, and Bunnak Poch. 2007. "The Phoenix Population: Demographic Crisis and Rebound in Cambodia." *Demography* 44(2): 405-426.
- Hirschman, Charles, and Philip Guest. 1990a. "Multilevel Models of Fertility Determination in Four Southeast Asian Countries: 1970 and 1980." *Demography* 27(3): 369-394.
- Hirschman, Charles, and Philip Guest. 1990b. "The Emerging Demographic Transitions of Southeast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1): 121-152.
- Hirschman, Charles, and Young-Jin Young. 2000. "Social Context and Fertility Decline in Southeast Asia: 1968-70 to 1988-90."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Supplement): 11-39.
- Hoechle, Daniel. 2007. "Robust Standard Errors for Panel Regressions with Cross-Sectional Dependence." *The Stata Journal* 7(3): 281-312.
- Inglehart, Ronald, and Pippa Norris. 2003. *Rising Tide: Gender Equality and Cultural Change around the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ones, Gavin W. 1990. "Fertility Transitions among Malay

- Populations of Southeast Asia: Puzzles of Interpreta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3): 507-537.
- Luci-Greulich, Angela, and Olivier Thévenon. 2013.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Trends in Develope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29: 387-416.
- Kiernan, Ben. 2008. *The Pol Pot Regime: Race, Power, and Genocide in Cambodia under the Khmer Rouge, 1975-79*. 3rd ed.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 Kirk, Dudley. 1996.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Studies* 50(3): 361-387.
- McDonald, Peter.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http://www.jstor.org/stable/172314>
- Myrskylä, Mikko, Hans-Peter Kohler, and Francesco C. Billari. 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460: 741-743.
- Notestein, Frank W., Irene B. Taeuber, Dudley Kirk, Ansley J. Coale, and Louise K. Kiser. 1944. *The Future Population of Europe and the Soviet Union: Population Projections, 1940-1970*. Geneva: League of Nations.
- Rindfuss, Ronald R., Minja Kim Choe, and Sarah R. Brauner-Otto. 2016. “The Emergence of Two Distinct Fertility Regimes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5: 287-304.
- Straits Times. 2024/03/11. “Pregnant Women in War-Torn Myanmar Face Perilous Childbirth.” <https://www.straitstimes.com/asia/se-asia/pregnant-women-in-war-torn-myanmar-face-perilous->

childbirth (검색일: 2025/03/05.)

World Bank. 202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Yeung, Wei-Jun Jean. 2022. *Demographic and Family Transition in Southeast Asia*. Cham, Switzerland: Springer.

Yeung, Wei-Jun Jean, Sonalde Desai, and Gavin W. Jones. 2018. "Families in Southeast and South Asia." *Annual Review of Sociology* 44: 469-495.

(2025.04.25. 투고, 2025.04.28. 심사, 2025.08.02. 게재확정)

<Abstract>

Macro-Level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Southeast Asia: 1961-2022

Chonghyun CHOI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nalyzes the macro-level determinants of fertility change in Southeast Asia from 1961 to 2022. Unlike previous research, which has either examined global determinants of fertility change or focused on micro-level analysis of the Southeast Asian region, this paper empirically investigates a range of macro-level factors that may influence fertility change in Southeast Asia,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political factors. As in other regions, a general decline in fertility is currently observed across Southeast Asia, but the speed and magnitude of this decline vary considerably between countries. Building on the view that political factors may also have contributed to these differences—beyond the socio-economic variables highlighted in prior studies—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democracy, political instability, and state capacity on fertility. Panel data analysis indicates that political instability triggered by mass mobilization tends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with fertility. This finding suggests that fertility rates can be shaped not only by socio-economic factors but also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Furthermore, it implies that fertility decline may occur as

part of a process in which overall societal and economic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crease.

Key Words: Southeast Asia, fertility, low fertility, political instability, demographic transition